

데스크 톱



이연수 부국장 겸 경제부장

“이번 설엔 안 내려갈게요.”

큰 애가 설 연휴에 집에 내려오지 않겠단다. 근무지에서 이를 밖에 쉬지 않는데다, 오가면서 고속도로에서 허비할 시간을 생각하면 그냥 이를 꼭 쉬는 게 낫겠다는 게 이이다.

그래, 그렇게 하렴. 서운함이 스쳤지만 보고싶은 마음 한 편을 이내 접는데 여자리 동료가 한 마디 거든다. “요즘 애들은 서울이 좋은가봐. 한번 올라가면 집에 내려올 생각을 안해. 심지어 애들 엄마도 서울로 보내 놓으니까 거기 좋다.”

큰 애가 집에 내려오지 않는 게 이번 설만은 아니다. 공부, 아르바이트, 촬영 등 그때 그때 꼭 일이 생겼다. 으레 집에 모여 좋은 음식 구성원 각자의 ‘도리’가 강요되는 즐겁지 않은 명절을 지금의 ‘MZ세대’에게 강요할 수 없다. 힘든 명

절을 보내고 보복소비에 불비는 연휴 뒤 끝의 백화점, 피부관리샵, 성형외과, 골프장은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하다.

문제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생각을 안하는’ 청년들의 삶이다. 그저 편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불안정하고 고단하며 위험에 내몰리면서도 떠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학력 청년 취업 ‘좁은 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62만 8,000명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 13만 명 중 절반은 2030 청년층이다.

지난해 대졸 이상 취업률은 65.1%로 2011년 이후 최저치였다. 수도권 졸업자의 취업률이 66.8%, 비수도권 취업률이 63.9%다.

취업자는 비취업자들 청년들은 ‘잡’ 아닌 ‘방’ 한 칸에 살며 적지않은 월세를 지불하면서도 좀체로 수도권을 떠나지 못한다.

수도권이라는 특정 지역에 그들이 물리는 건 어찌보면 그곳에 바늘구멍이라 할 자라도 ‘기회’가 있고 지방과는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회와 문화가 있는 곳에 경제가 있고, 청년들은 자석

청년이 뿌리내릴 곳은

처럼 그곳을 떠날 수 없다.

나주혁신도시 이전 16개 기관이 입주할 시작한 지 8년이 됐지만 지금도 금요일 오후면 임직원 중 절반은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떠나는 열차와 버스에 몸을 싣는다. 서울의 삶을 떠날 수 없는 가족들과 그들은 동반 이주하지 못했다.

2020년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743곳이 수도권에 위치한다. 100대 기업으로 좁혀보면 서울·인천·경기에만 91곳, 이 중 78곳이 서울에 있다. 물론 이들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향하는 문은 청년들 예컨 너무나 좁다.

한국경총의 조사 결과가 눈에 띈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이라는 것.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임금 및 복지수준(37.6%), 고용 안정성(21.7%), 워라밸 및 기업문화(20.5%) 순으로 나타났다. 어디까지나 청년들의 ‘바람’이다.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이며, 취업자 중에서도 40%는 비정규직인 현실 속 이런 조사 결과는 고학력 백수청년의 심각성을 피부에 와닿게 한다.

2007년 출간된 우석훈·박권일의 ‘88만원 세대’는 취업난과 비정규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20대의 불만을 드러낸 책이었다. 88만원 세대는 이후 삶의

요소를 하나씩 포기하는 ‘N포 세대’를 거쳐 ‘MZ세대’에 이르렀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MZ세대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주택 공급 물량 배정, 병사 월급 200만원, 가상자산 투자 수익 비과세 등인데 당면한 청년문제의 궁극적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청년일자리는 고사하고 변변한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없는 지방에도 기회가, 일자리가, 그래서 청년이 모일 수 있을까.

지방에도 일자리와 기회를

너무 빨라서 숨막히고, 챗바퀴 도는 삶은 고단하지만 일자리가 있고, 문화가 있고, 경제가 돌아가는 곳에 사람이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 청년들이 뿌리 내릴 기회를 지방에도 만들어 줘야 한다.

노·사·민·정 등 경제주체가 합의를 이루고, 이에 기반해 사업을 벌이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은 청년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워라밸 균형을 이룬 삶을 일구길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청년들이 더이상 시급 알바를, 비정규직을 전전하지 않기를. 즐겁지 않고 창조적이지 않은 일, 위험하고 누구도 하기 싫은 일자리에 채워돼 위태로운 직장생활을 이어가지 않기를...

설 연휴 평온하고 건강하게 보냈으면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경찰청 등이 내달 2일까지 설 연휴 특별방역과 시민 생활안전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심상찮은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는 시기에 명절을 맞아 각 기관의 종합적인 대책과 협력, 그리고 시민들의 세심하고 철저한 지방에도 기회가, 일자리가, 그래서 청년이 모일 수 있을까.

광주와 전남지역 오미크론 감염자가 하루 수백 명씩 쏟아져 건강감을 주고 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이동으로 폭증세가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방역 당국은 시민들에게 ‘잠시 멈춤’을 호소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 인파가 물리는 다중이용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유통매장, 성묘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관건이다. 자칫 집단적으로 환자가 잇따라 발생할 경우 방역의 독이 거침없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명절나기가 요구된다.

이번 설은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소외이웃들에 대한 보살핌도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의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설 제수 품목의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실제 지도 및 단속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현장 지원이 절실하다.

설 연휴 기간에는 아무래도 귀성·귀경 차량의 교통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교통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상황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이 실시간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해소돼야 한다. 명절 응급환자의 의료서비스체계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다시 맞는 이번 설이 모두에게 이롭고 건강한,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당국의 기민한 대처와 시민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명절 코앞인데 광주 택배대란이라니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한 달째다. 설 대목을 앞두고 광주에서는 ‘택배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CJ대한통운 소속 근로자 15%가량이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전체 법정노동의 절반 정도가 파업지역으로 분류돼 배달이 늦어지고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5일 광주 남구 송하동 송암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측에 사회적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 처우 개선을 약속했으니 지키라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28일 총파업을 시작하면서 수수료 인상, 별도 요금 폐지,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저상탑차 대책 마련, 집하 수수료 차감 폐지를 요구했다. 이처럼 국내 택배업계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지역 곳곳에서 택배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통업계가 분석한 택배노조 파업 영향 지역에는 광주 5개 자치구와 여수시, 장성군이 포함됐다. 광주 전체 행정구역 202곳 가운데 97곳(48.0%)에서 택배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물량이 엄청나다. 광주에서 CJ택배기사 180여 명이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CJ대한통운이 파업하고 있으니 그 여파는 실로 크다.

택배노조가 설 명절 성수기에 맞춰 장기파업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시선은 좋을 리 없다. 유통이 막히니 물건을 파는 상공인은 물론 물건을 보내고 받는 소비자들이 불편하다.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 모두가 대책 마련, 집하 수수료 차감 폐지를 요구했다. 이처럼 국내 택배업계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기고



이재남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

돌봄, 방과 후 과정은 학교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 영역이다. 여기에 유아 영역을 포함하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교 안과 밖의 교육영역을 총괄한다. 교육복지의 교육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외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더 나은 양질의 교육적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영역이 학교 교육에서 담당할 일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상당부분 일반 사회복지가 담당해야 할 영역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준비 안 된

학교에서 떠안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정책추진의 편의성만 고려해, 낫감 빼먹듯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 역할을 학교에 조금씩 떠넘겨 왔다. 이제 그런 땀땀 식 처방이 한계에 도달했다. 관련 업무의 과도함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이 침해받고 있다는 교사들의 주장과 돌봄사, 교육복지사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인력의 불안정성과 관리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고, 방과후 바우처 예산 등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효율성에도 의문이 생기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본다. 기본방향은 운영 주체를 분리해 전문화하는 방안이고, 이것이 어렵다면, 학교 내 복지체계(복지교과)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운영 주체 분리는 (가)교육복지공익법인 설립, 이사회는 지자체, 국가, 교육청, 학부모, 지역기업이 맡아서 별도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운영 주체를 분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나 프로그램의 질을 고도화 할 수 있다. 지자체나 기업들이 교육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감사들 또한 더

학교 교육복지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안정적인 직장을 모색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의 부족한 부분을 맡아왔던 지역사회나 각종 학원, 학교 안 담당 인력의 연착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상생의 원칙을 가지고, ‘한 아이를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교육복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기존의 학교 체제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교육복지 교감을 늘려, 행정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기존인력을 그대로 재편성해 학교 내부에 교육복지 교감이 총괄하는 체계가 될 것이다.

복지교감은 교육적마인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운영과 인력, 행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학교가 학원화되지 않게,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교육복지운영위원회에 적극 참가해, 운영을 자문, 심의, 결정해야 한다. 우선 학교 내 시설 여유가 있거나 추가 건축이나 활용의 여지가 있는 학교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학생 수 감축으로 인해 예비교사의 선

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교원의 승진적제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 가장 큰 효과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복지 영역을 안정화시켜 저년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하고, 다양한 양질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해마다 이런 고민은 계속되었지만, 선거할 때만 선심을 쓰는 정책 때문에 그동안 학교가 모든 것을 떠맡아왔다. 이러는 사이에 관련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관련 인력도 점점 늘어나서 기존의 학교시스템으로는 운영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국민에서 농산물꾸러미, 복지예산 집행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집행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학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들이 관련 업무거부선언을 하고 있고, 관련 비정규직 인력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노무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지광장

명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영향 탓에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도 택배가 대중화되면서 편리한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 주변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에서 인터넷 쇼핑물 업체와 텔레비전 흡소품을 통해 주문한 택배 운송장이 종이상자에 붙어있는 상태로 버려진 것을 흔히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심코 버린 택배 운송장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알

택배상자 개인정보 노출 사전 차단 필요

고 있는 주민은 그리 많지 않다.

이렇듯 택배 상자 겉면에 부착된 화물 운송장에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 각종 배송지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쓰레기장에 버려진 택배상자에 붙은 운송장 정보를 이용해 택배 배달원을 사칭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

어는가 하면 운송장에 적힌 전화번호를 이용해 집으로 전화를 해 빈집임을 확인한 후 빈집털이를 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일부 택배회사에서도 운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가상 전화번호를 기재해 실제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는 있으나 개인정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번거롭더라도 운송장을 떼어내서 박스를 버리 등 이용자가 범죄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별거 아니라고 방심하는 사이 나중에 오히려 독이 돼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택배를 받는 즉시 운송장을 떼어 내바로 폐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배송지 정보를 잘게 잘라낸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습관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수면위로 떠오른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

기지사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목포-제주 해저터널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서울-제주 해저터널은 서울발 호남고속철 종착지인 목포에서 제주까지 총 연장 73km구간을 해저로 뚫어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완 재주지사가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 국토부 타당성 조사결과와 해저터널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못미치는 0.78수준에 그치며 제동이 걸렸다.

한동안 잠잠했던 해저고속철도 이슈는 2016년 유례없는 폭설로 제주공항이 마비되자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가 ‘해저터널을 통한 서울-제주 구간 KTX 개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점화했다.

하지만 공사 기간 16년, 투입 예산 16조 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라는 점과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을 우선 추진하면서 15년째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극심한 반대 또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제주도는 “제주의 정체성을 섬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며, 쓰레기 유발, 단기관광 심



김용현 제주부 차장대우

화, 환경훼손 등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와 일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철도망이 구축된다면 해저고속철도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낙후된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해저터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전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그만큼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여전히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부 부처·전남·제주 등 관계기관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지 기대한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fire, and medical services.

Table for Jeonnam Daily (전남매일)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ddress,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editorial, circulation, advertising, etc.), and subscription rates.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